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향이라는 감각, 목서라는 이름의 식물

작년 이맘때 완도수목원에 다녀와 찍은 식물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더니 한 친구가 말했다. "나 거기 알아. SNS에서 봤어." 식물원, 정원, 미술관, 박물관... 최근 대중에게 인기 있는 장소에 관해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대화는 SNS 경험담으로 흐른다. 그간 코로나로 외출을 못 하게 되자 SNS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경험하는 '온라인 삶'을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식물 문화 또한 온라인상의 대중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식물원에서는 SNS계정으로 오늘 개화한 정원의 식물 사진을 공유하고,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정원 투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식물원에 직접 가면 SNS에 올리기 좋은 '포토 스팟'을 만들어 둔 곳이 많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접한 식물 사진과 동영상 정원 투어로 우리가 식물과 그 장소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생물이란 기록된 이미지와 영상으로 모든 정보가 전달될 만큼 납작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은 이 오감을 감각한다는 의미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식물 세밀화가이기에 시각 이미지를 주로 관찰하지만 가령 민들레를 관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잎의 상쾌한 향기를 맡고, 민들레를 맴도는 벌의 소리를 듣기도 하며, 잎의 까슬까슬한 촉

감도 느낀다. 하지만 내가 기록한 그림에는 청각과 후각, 촉각과 미각은 삭제된 채 시각에 의한 이미지만이 담겼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후각과 미각과 촉각은 삭제되어 있다. 우리는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코로나를 겪으며 내게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식물을 보러 가는 장소와 만나는 식물의 향을 더욱 예민하게 감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향을 맡는 경향이 더 귀해졌기 때문이다. 향은 전달과 재현이 힘들다. 일본에서 보낸 물건이 우리나라에 단 하루 만에 도착하고, 제주도에서 보낸 음식을 만나질만에 서울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나는 지금 집 근처 정원에서 나는 달콤한 계수나무 향기를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없고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보여줄 수 없다. 작년 이맘때 나는 직접 맡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삶이 고립되고 정체될수록 향기란 존재는 더욱 귀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목서속 식물들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 목서 꽃이 핀다는 것은 공기 중에 진한 꽃향이 깃들여 있다는 말이다. 목서는 한 종의 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목서속 식물로는 목서, 금목서, 은목서, 구름나무,

박달목서 등이 있다. 이들은 교잡되고 개량되어 정원에 심어졌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은목서라 부르는 나무가 실은 은목서가 아니라 구름나무 교잡종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목서속 식물의 제대로 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일이다. 목서는 보편적인 현화식물보다 꽃이 작고 덜 화려하지만 또 공평하게도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짙은 꽃향이 난다. 이들의 강력한 향기는 이미 화장품, 향수의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목서 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향기를 묘사하는 것만큼 어렵고 부질없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남부 지역의 가로수, 화단, 공원, 마당 등 식물이 있을만한 모든 곳에서는 어김없이 주황색 꽃의 금목서와 미색의 은목서 꽃이 만개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부 지역의 사정일 뿐 내가 사는 경기도에서는 목서속 식물의 근황을 전혀 알 수 없다. 작년 이맘때 나는 완도수목원에서 금목서 꽃 향을 맡았다. 늦은 오후 노을 색과 구별하기 힘든 주황색으로 피어난 금목서 꽃에서는 달콤하면서 우아한 향기가 났다. 다음날 서울에 올라와 버스터미널 근처 백화점을 지났을 때,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목서의 또 다른 이름 오스만투스(목서속의 속명)라는 이름의 향수를 맡았다. 그러나 당연히 하도 향수에서는 내가 전남 땅을 금목서의 향을 맡을 수 없었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만성 염증성 장질환

스, 식사 습관, 복용하는 약물 등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증성 장질환은 반복적이고 갑작스럽게 복통과 설사가 찾아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아울러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 치료가 늦어지거나 소홀하면 지속적인 혈변, 장협착, 장천공 등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염증성 장질환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환을 빨리 발견하려면 먼저 의심 증상을 이해해야 한다. 만성 설사, 복통, 혈변, 체중 감소가 지속되면 염증성 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증상, 내시경 및 조직 병리 소견, 혈액 검사 소견, 영상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가장 기본적인데 꼭 필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다. 내시경으로 장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직 검사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고 다른 종류의 대장염과 구별한다.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복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나 전산화 단층촬영 등 다른 검사 소견을 참고한다. 그 외에 혈액·형질 검사 및 대변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크론병(Crohn's disease)은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크론병이란 이름은 1932년 미국 의사 크론이 처음 보고한 데서 유래했다. 비슷한 증상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비교되지만 병변

의 위치, 범위,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발생하고 염증이 얕으며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소장과 대장에서 많이 발병하고, 염증이 깊으며 띄엄띄엄 분포한다.

한때 크론병은 서구에서는 흔하지만 국내에서는 희귀 질환으로 분류될 만큼 발병률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환자가 부쩍 늘었다. 연간 2만 명을 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크론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2만 2408명으로 2014년 1만 6728명에서 4년간 34%나 급증했다.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눈에 띄게 늘어 국내 한 대학병원의 논문에 따르면 크론병 10대 발병률은 2009년 10만 명당 0.76명에서 2016년 1.3명으로, 20대는 0.64명에서 0.8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궤양성 대장염은 장과 대장에 얽은 궤양이 발생하는 염증으로, 병변의 위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 궤양성 직장염의 경우 직장에만 나타나며 좌약(또는 관장액)으로 치료한다. 좌측 대장염은 하행결장, 에스결장, 직장 등에 나타나며 경구약과 좌약으로 치료하고, 진단 12년 후부터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2년마다 대장 내시경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전대장염은 맹장부터 직장까지 모두 나타나는데 경구약과 좌약으로 치료한다. 진단 8년 후부터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2년마다 대장 내시경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측(구역성) 대장염은 맹장과 상행결장에 새로 추가된 아형으로 드물게 발생, 일부에서는 직장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기고

광주 군 공항 국가 책임으로 조속 이전해야



양진석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호충회 회장

를 발표하고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만 국방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하다는 통보만 마친 상태로 이전 후보지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광주광역시와 이전 부지에 15.3㎢(460만 평) 규모의 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종전 부지(송정리 군 공항) 8.2㎢(248만 평)를 양도받아 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방식인데 아직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되지 않았고 이전 대상 지역인 전라남도나 해당 시군과의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간 협의를 최우선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군 공항 소음법 보상에 따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상비 부담이 작용해 국방부에서도 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광주 군 공항 개항 당시에는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리 소재이었듯이 광주와 전남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한 뿌리이고 경제적으로도 공동 운명체이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주어야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개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라남도 입장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대책과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지

원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남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주민 직접 지원 사업비 규모를 기존 4500억 원보다 대폭 늘려 2조 원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각 지자체가 서로 유치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민선 8기 광주호를 이끄는 강기정 시장의 뜻이기도 하다.

지난 7월 광주-전남 상생 협력 합의안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군 공항 면적 조정과 완충 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공동 건의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이전 노력을 전제로 특별법을 통해 국방부 주도로 이전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여 국가 사업화하고 정부 지원이 가시화된다면 유치를 원하는 지역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새로 건설되는 대구 통합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굳은 의지만 있다면 2030년 이내 대망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되리라 기대해 본다.

社說

전봇대뿐 아니다...대불산단 물류 개선 박차를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자 불합리한 규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자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로 꼽히면서도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전봇대들이 마침내 모두 제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덕분이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2년간 223억 원을 투입해 5.07km 구간의 전선 지중화를 추진한다고 그제 밝혔다. 대불산단은 국내 유일의 중층형 선박 블록·기자재 생산 기지로, 제작된 대형 블록은 육로를 통해 대형 조선소로 운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단 내 전봇대와 전선들이 큰 장애물이 돼 왔다. 기업들은 블록을 운송할 때마다 전선을 피해 우회하거나 절단 후 재연결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선로 절단과 재연결에는 한 차례에 500만 원 이상 소요된다.

지난 2008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입주 기업들의 물류 수송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전봇대 제거를 지시한

이후 2년 동안 대로를 중심으로 255개가 제거됐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예산 지원이 중단돼 안쪽 전봇대 180개는 그대로 남아 기업들을 괴롭혔다. 최선의 대안은 전선 지중화였지만 막대한 재원을 지자체가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다.

남은 전봇대 제거가 성사된 데는 전남도의 적극 행정도 한 몫을 했다. 그동안 전선 지중화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학교나 전통시장 인근 등 일부 구역에 한정됐는데 전남도가 국회와 정부, 한전을 수차례 방문해 규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전력선을 지중화하더라도 가로등과 신호등 등은 여전히 장애물로 남게 된다. 한동안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던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발주량이 급증하면서 호황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발주 선박들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입주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로를 일원화하는 등 기반 시설 리모델링을 서둘러 물류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범죄에 취약한 '오픈 बैं킹' 보안 대책 서둘러야

현대전화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바일 시대, 오픈 बैं킹을 통한 허술한 대출 시스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그제 SNS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1억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받아 갚긴 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범인은 보험설계사가 SNS에 올린 고객 개인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우선 보험설계사가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고객 정보를 SNS에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 보험설계사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타인의 개인 정보만 확보하면 일사천리로 오픈 बैं킹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범인의 대출 사기 흐름도를 보면 비대면 대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범인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통했다. 유심은

개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의 칩으로, 이 칩만 있으면 모바일 시대에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바일 대출도 마찬가지로인데 범인이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오픈 बैं킹으로 대출을 받기까지 제어 장치가 없었다. 범인은 불법 대출받은 1억 원으로 가상 화폐를 사서 자금 세탁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유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오픈 बैं킹이 금융 사기 범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오픈 बैं킹 이용자가 국민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번 사건처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금융권 스스로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재검토해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감독 기관에서도 개인 정보 관리와 함께 오픈 बैं킹의 허점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입사 3년 만인 1997년 'IMF 사태'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월급은 반토막났고, 갑자기 구조 조정이 시작돼 상당수 동료, 선배들이 짐을 싸야 했다. 회사 역사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국가 전반의 경기 침체, 실업률은 5년 이상 계속됐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서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 스멀스멀 세계 불경기의 바람이 불어 오고 있다. IMF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올해

존재 이유

(3.2%)보다 낮춰 잡았다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 준 금리를 올리고 있어 소비와 투자 수요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으며, 유럽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천연가스 등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코로나 봉쇄 정책, 미국과의 마찰 등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 역시 바닥을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가장 먼저 부동산에서부터 비상이 나왔다. 터무니없는 분양가에 웃돈을 주며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구입했던 소위 '영끌족'들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고, 은행 돈을 빌려 도시·농어촌 곳곳에 고층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향후 자금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긴축 재정은 가장 먼저, 가장 독하게 저소득층을 괴롭힐 것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다.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은 1846년부터 1873년까지 장기 공황을 겪으면서 철도·항만·도로 등 기반 시설을 촘촘하게 설치해 미래를 대비했다. 1929년 대공황 때 맞은 미국은 1933년부터 5년간 뉴딜 정책으로 실업을 제고, 노동자 복지, 다리·공원 등 공공 사업, 예술가 지원, 부자 증세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개혁을 추진해 초강대국의 기반을 닦았다.

비상 사태엔 울리고 있는 지금, 국가 기관들은 사정 칼날을 휘두르느라 정신이 없고, 여야는 정쟁에 파묻혀 있다.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지만, 그러다가 초가삼간 태울 것 같아 걱정이다. 경제난에 대비한 대책만큼은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곡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